

# 통일 독일의 상호대차제도에 관한 연구

노 문 자

## 목 차

I. 서론	나. 상호대차종합목록연구소 (ILZ)
II. 세계 제2차대전까지의 독일상호대차	다. 지역상호대차와 지역종합목록센터
III. 국가분단 후의 상호대차	라. 전문도서망과 전문종합목록센터
1. 서독의 상호대차	IV. 통일 후의 상호대차
가. 서독학술진흥재단 (DFG)	1. 통일에 대비한 동·서독 도서관계의 방향과 대책
나. 서독국가협동수서정책 (SSG-프로그램)	2. 통일 후 DFG의 도서관지원계획
다. 지역종합목록센터 (ZK)	3. 통일독일의 임시 상호대차 규정안
라. 지역상호대차 (Regionale Leihverkehr)	V. 결론
마. 전국상호대차 (überregionale Leihverkehr)	
2. 동독의 상호대차	
가. 동독국가협동수서정책	

## I. 서 론

인구, 국가의 면적,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주변환경에 처했던 독일이 예상보다 빨리 닥친 통일을 맞아 소위 "통일비용"이라는 커다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도서관문제에서도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발달된 40여년의 시간을 다시 통합하는 소화기간동안 여러가지 진통이 예상된다. 예를들면 분단후 제각기 서로 다시 설립했던 국립도서관과 본 논문의 주제와 인접한 두개의 국가협동 수서정책등등 모든 면에서 두가지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는데는 진지한 대화와 협상, 경제적 지원이 잇따른다.

통일독일의 상호대차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국가 분단 전후의 상호대차를 알지못하고는 통일후의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또한 독일의 상호대차가 우리에게 거의 구

체적으로 알려진 논문이 없어 논문을 분단 전후로 대별하였으며, 여기에서도 통일후의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때문에 분단전의 상호대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대차제도, 즉 한 국가의 도서관시스템과 밀접한 타 도서관끼리의 자료제공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중앙집중식<sup>1)</sup> 분단식 또는 혼합식으로 구별한다. 세계에서 한 국가 단위로서는 분단식의 대표적인 모델인 서독의 시스템과 혼합형이랄 수 있는 동독의 시스템이 통일 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학술연구의 자료제공을 원활하게 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동 서독이란 표현과 개념은 현재의 통일된 상황에서 다소 위배된 느낌이지만 편의상 과거의 개념대로 적용시켰다.

## II. 세계 제2차대전까지의 독일상호대차

독일의 상호대차는 국가차원의 상호대차가 출범하기 이미 전부터 각 소영주 국가 ( 지금의 주, Land 개념 ) 내의 도서관들이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실시하였다. Wittenberg 에서는 1816년에 튜빙겐 (Tübingen) 대학교수가 왕궁도서관의 자료를, 1837년에는 Gießen 대학교수가 이 대학도서관의 알선으로 Darmstadt대학 도서관의 장서를 1853년에는 Jena 대학 학생이 Weimar도서관의 장서를 이용했던 사례들이 문헌상 기록되었다.<sup>2)</sup> 이미 1797년에 여러도서관들이 계획적인 협동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에서 그들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세계 문호인 괴테는 쉴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도서관간의 종합목록을 발간하여 서로의 자료를 이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했다.<sup>3)</sup> 이러한 주변상황의 성숙은 1890년 독일 전 영토 소국가간의, 또는 불란서등 외국간의 상호대차를 위한 규정이 만

1) Line, M.B: 國家相互貸借制度의 모델研究 李鎮相 譯 국회도서관보 1982. 3·4월호 p44-56

2) Koschorreck, W. : Geschichte des Deutschen Leihverkehrs. Wiesbaden. Harrassowitz. 1958 p.31-42

3) Widmann, H. : Zur Vorgeschichte der Sondersammelgebiete der Deutsche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Libri 17(1967).p.14

들어졌고 1892년에는 프러시아국가 단독의 규정도 만들어졌다.

19세기 초반까지만해도 각 도서관의 규정에의하면 외국에서의 자료신청은 먼저 해당국의 소속기관에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만약 비엔나의 학자가 파리의 국립도서관의 자료를 필요로할 때 그는 오스트리아의 문교부 소속관에 먼저 신청을 한다. 비엔나의 문교부 담당자는 오스트리아의 외무부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이 요구사항을 파리에 주재하는 비엔나공관에게, 이 공관의 책임자는 파리의 외무부 담당자에게, 또 이 요구는 파리의 문교부에, 그리고 드디어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이용자의 요구가 전달된다. 이러한 절차는 하나의 자료가 이용자의 서재에 도착하기까지는 몇달을 경과한다.<sup>4)</sup> 이러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의 상호대차협정이 1890년에 정해졌다.

독일영토내 소국가들의 상호대차는 여러면에서 지도적 위치에있던 프러시아에서 1892년 규정이 시작되어 점점 다른 영토에 확산되었다. 이 규정은 1910년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는 독일 도서관 발전에 기여했던 A. von Harnack, Dziazko, Althoff 의 영향이 컸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독일상호 대차를 위한 클리어링하우스적인 독일 중앙정보센타 (*Auskunftsbro*)가 1905년 백림에 설립되었다.

1910년 개정된 프러시아 상호대차규정은 1차대전으로 인해 또 다시 다른 상황에 처하게되었다. 전쟁 직후에는 어느때보다도 자료의 상호보완관계가 더 절박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특히 외국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은 상호대차에서 자료의 제공에 난관에 부딪히게되어, 이는 독일학문의 위기론까지 대두될 정도였다. 1차대전과 세계경제공황은 도서관계가 상호대차를위한 요책을 찾는 절실한 기회였고, 이 기회는 상호대차의 기본조건인 합리적인 장서구입안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자료의 구입은 몇몇의 대규모 도서관들이 분야별로 분담하여 수서, 정리한 자료들을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국가협동수서정책 (*Sonder-sammelgebiets-Programm*, SSG-프로그램)이 더욱 성숙단계에 이르렀다.<sup>5)</sup>

이와 때를 같이하여 독일학문의 위기론에 대한 반향으로 1920년에 "독일학문발

4) Koschorreck, W. Geschichte... p.9

5) Widmann, H.: Zur Vorgeschichte... p. 17-18

전 비상대책재단 (Notgemeinschaft der Deutschen Wissenschaft)<sup>6)</sup>이 설립되었다. 여기서도 독일상호대차와 관련하여 국가협동수서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서 독일의 국가협동수서정책은 완전한 기반위에 독일상호대차에서 분산식 자료수집과 제공을 선택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정책은 현재까지 답습되고있다.

1924년 전 독일국토를 포괄하는 독일상호대차규정 (Deutsche Leihverkehrsordnung, DLVO)<sup>7)</sup>이 탄생되었다. 이 규정은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각 지역 (Land) 마다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도 움직이고있던 각 도서관의 제도를 종합한 하나의 통일된, 전 독일을 상대로한 규정이었다는 점에서 도서관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의 불균형문제, 각 주마다 실시하고있는 상호대차 규정과 독일제국 전국을 포괄하는 전국 상호대차규정의 이원화에 따르는 혼란, 상호대차를 이용한 학자들의 불만고조, 이에 따른 상호대차 위기론, 1930년부터 상호대차를 주도해온 독일학술발전비상대책재단의 도서관예산 삭감 등 내, 외적인 요인으로 독일 상호대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DLVO는 1930년에 개정되었다.<sup>7)</sup>

1933년 나치정부의 시작부터 상호대차의 위기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1932년에 프러시아국립도서관의 통계에 의하면 76,370건의 상호대차를 통한 대출이 1933년에는 63890건으로 감소됐다.<sup>8)</sup> 국가 사회주의 정부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상호대차의 기능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전쟁 발발직전인 1938/39년에는 51416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숫자는 1926/27년의 수준이었다.<sup>9)</sup> 통계숫치가 줄었다고 상호대차의 여건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대규모 도서관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시달렸고, 마지막에 가서는 도서관 현지이용자의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겼다. 1938년에는 독일에서 5년내에 출판된 국내의 단행본과 3년내에 출판된 정기간행물조차도 상호대차에서 제외시킬 정도였다. 이때 특히 거주지 이용자의 서비스와

6) Koschorreck, W. : Geschichte...p.45

7) Koschorreck, W. : ibid...p.61-71

8) Koschorreck, W. : ibid...p.78

9) Koschorreck, W. : ibid...p.79

자료의 외적손상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복사물을 도입하기도 했다.<sup>10)</sup>

세계2차대전의 발발은 상호대차의 침체기를 의미했다. 1939년 9월 1일 까지만 해도 상호대차에 관한 부분적인 변경사항들이 허용됐으나 그해 9월 12일에는 문부성에서 상호대차제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어 사실상 그 기능은 매우 축소되었다. 그때까지만해도 단행본은 1달, 정기간행물 2주일, 手書는 3개월이었던 대출기간이 단행본이 단지 1주일로 단축되었고 대출도서도 그 도서의 내용이 전쟁 수행상 관련있는 중요자료인 경우에만 대출이 허용되었다.<sup>11)</sup> 또한 대출받은 도서관도 자료를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반납토록 책임져야 했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관련된 자료에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않아 사서들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1941년 문부성에서는 전쟁수행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새로운 기관 15곳을 독일상호대차에 참여시켰다.<sup>12)</sup> 1943년에는 대규모도서관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공중전 이 치열해져 사실상 도서관 업무를 중단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자료의 운송도 폭격때문에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러서 도서관마다 자료의 대출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3년 하이델베르그 대학도서관에서는 그들의 상호대차 대출은 대출용지에 이용자의 주소가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Speyer주립도서관에서는 1943년 8월부터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호대차를 허용했고, 대여를 할때도 관내이용을 전제로 했다. Tubingen 대학도서관에서는 그들의 자료를 대출하는 조건으로 자료의 가치에 해당되는 담보를 요구하기도했다.<sup>13)</sup>

이러한 특수상황에서도 도서관들은 상호대차의 맥을 끊지않으면서 그들의 업무를 지속한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대차의 서비스는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10) Koschorreck, W. : Ibid...p.80

11) Koschorreck, W.: Ibid...p.81

12) Koschorreck, W. : Ibid...p.81

13) Koschorreck, W.: Geschichte...p.82

기능이 마비되어가는 두가지 극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도서관끼리 탄탄히 구성된 상호대차의 조직 자체가 순간순간 그의 마지막을 예고했고, 결국에는 독일상호대차의 종말에까지 오는 처절한 경험을 해야했다.

### Ⅲ. 국가 분단후의 상호대차

#### 1. 서독의 상호대차

전쟁후 동 서독의 서로 각기 다른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발전상황은 도서관발전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것은 최근 다시 통일된 후 도서관계의 협동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전쟁의 피해는 독일도서관에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45년 정전 협상이 끝난 후 서독도서관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설령 자료가 있었다해도 폭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옮겨졌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했다. 독일의 상호대차는 단지 위의 이유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 본질적인 근원은 독일상호대차제도 자체가 전무해졌다고 볼 수 있었다. 전쟁 전까지도 독일상호대차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프러시아국립도서관은 그들 자료의 손실과 도서관의 분산(동·서 베를린)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려웠고, 남쪽의 바이에른 국립도서관의 피해는 타도서관보다 덜했지만 역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었다. 독일상호대차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대규모 대학도서관들도 완전히 파괴됐거나 국가의 분단으로 동독쪽에 남게 되었다. 상호대차의 재건이 어려웠던점은 바로 언급된 이유들보다도 상호대차의 하부구조 자체가 분산, 마비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전쟁의 실패로 과거 상호대차의 핵심요소였던 독일제국도서관위원회 조직 자체가 소멸되어 버렸다. 또한 이 독일제국도서관위원회의 전신이었고 독일상호대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관계의 모든 문제를 주도, 관할하고 심의, 조정 역할을 했던 프러시아도서관위원회 같은 기구도 새로 탄생되지 못했다. 상호대차의 마비에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상호대차 도구의 손실이었다. 독일의 국가종합목록은 완성되

기 이전에 중단되어버렸고, 이를 위해 수집했던 모든 자료는 분실되어 버렸다. 국가종합목록 이외의 학술잡지, 신문 등의 종합목록도 분단된 국가에서는 소재사항이 파악되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한 독일제국의 클리어링하우스였던 독일 중앙정보센타는 동독으로 넘어가 서독의 상호대차의 계획적인 조정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용 가능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의 욕구는 커질 수 밖에 없다. 2차대전 까지만 해도 1차대전 전후에 수집이 소홀했던 신간물을 수집하는데 주력했지만 2차대전 후에는 상황이 달랐다. 2차대전 후에는 서독의 출판업계가 거의 마비되어 출판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주 이용되는 최신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자구지책으로 과거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쟁전 1930년의 독일상호대차규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의 규정을 적용시키기에는 성격이나 구성, 형식, 참여도서관의 규모, 지역의 변화, 비용문제 등 어려운점이 산재했다. 과거처럼 중앙에서 상호대차의 참여 여건을 확정해주고 참여 도서관의 리스트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중앙조정기관이 없었다는 점이 서독의 상호대차를 재건시키는데 큰 어려움이었다.

1948년 5월 Hannover 도서관대회에서 서독도서관협회가 상호대차문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9월부터 회의가 시작됐다.<sup>14)</sup> 현저하게 변화된 상황이었지만 1930년의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해 10월 서독의 상호대차를 위한 기본원칙이 서독 도서관관장회의에 상정됐다. 이 서독 단독의 새로운 규정이 과거의 그것과 내용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상호대차에 대한 비용과 지역조정문제였다. 과거 각 권당 10 pf. 의 비용을 5배로 올리고, 수송비, 소포포장비, 보험비 등도 모두 이용자 부담이었음은 전쟁후의 어려웠던 경제상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1948년의 서독상호대차규정이 급한 상황에서 1930년의 그것을 보완하는 임기응변책<sup>15)</sup>이었기에 1951년에, 1966년 두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적용되고

14) Koschorreck, W.: Geschichte... p.86

15) Koschorreck, W.: Geschichte... p.87

있는 규정은 70년대 서독 도서관계획 (Bibliotheksplan '73)<sup>16)</sup> 서독 전문정보 시스템(Fachinformationssystem)과 연계되어 1979년에 세번째로 개정된 것이다.

서독상호대차규정이 시행되는 동시에 50년대부터 각 주에서는 각 주단위의 상호 대차규정이 확정되었다. Nordrhein-Westfalen주가 처음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타 주에서도 지역 상호대차규정에 따라 각 주의 자료공급체제를 확보하고있다. 이 지역상호대차는 다음에 언급될 지역협동수서정책과도 연계되 독일의 분산식 상호대차제도를 확립하는 동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각 소단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업이외에 분산식 서독상호대차시스템을 결정짓게한 국가협동수서정책의 기본 (SSG-프로그램) 골격을 제시, 지원, 조정하는 서독학술진흥재단 (DFG)을 먼저 다루고, 순차적으로는 SSG-프로그램 또한 체계적 구조를 채택한 분산식 상호대차시스템을 움직이는 요소들인 지역, 종합목록센터들을 고찰해 서독상호대차의 전개과정을 제시한다.

#### 가. 서독학술진흥재단 (DFG)

서독학술진흥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은 서독의 도서관 발전사에 서 빼놓을 수 없는 연방차원의 중앙조정역할을 하는 기관이다.<sup>17)</sup> 아무리 훌륭하게 수립된 도서관 발전계획이라도 그 후속조치인 재정지원이 따르지않으면 계획의 결실을 맺기 어렵다. 동 서독의 도서관 발전사에서 보면 국가의 행정체제에 따른 시스템의 영향 이외에 계획 자체에는 동 서독이 큰 차이를 보이지않지만, 그 계획의 시행과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동독에서는 서독의 학술진흥재단과 같은 재정지원이 뒷따르지 못했기때문에 동서독의 도서관에 큰 격차가 벌어졌음을 볼 수 있다.

과거 두번의 세계대전 사이 독일학문의 위기론이 고조된 당시 1920년에 설립된 독일학술발전비상대책재단에서는 독일제국의 상호대차에 깊게 관여하였다. 이 재

16) Bibliotheksplan'73, Entwurf eines umfassenden Bibliotheksn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1973 Deutsche Bibliothekskonferenz

17) Aufbau und Aufgabe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Bonn-Badgodesberg, 1974, p.5-10



단은 국가의 분단 후 서독에서 1949년부터 1951년까지 서독학술 긴급대책재단으로, 그 후에는 서독학술진흥재단으로 발족됐다. 이 재단은 서독의 학술발전을 위한 독립기관이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 조직위원회의 구성도 직접 선택한다. 정관에 의하면 이 재단의 회원은 대학, 고등교육기관, 학술아카데미, Max-Planck 연구소와 그외 몇몇의 학술단체 등 59단체에 이른다. 재정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49%씩, 그외는 기증으로 충당 운영된다.<sup>18)</sup>

DFG의 기능은 각 개인 연구자의 이니셔티브나 계획에 대한 재정지원, 서독학술 발전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자문,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직, 간접으로 학술발전을 추진한다. DFG의 발전계획에는 학술발전을 위해 어떤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주제에 대한 분야별 핵심계획, 이를 위한 연구진들의 구성, 또 연구사업의 보조지원으로서 연구센터의 설립,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그들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지원, 고등교육기관에서 특별 연구분야의 발전을 촉진, 학술도서관발전을 위한 지원 등이다. 이렇듯 서독 학술도서관에 대한 지원계획은 처음부터 DFG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점은 곧 국가의 학술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기본원칙에서 출발한 것이다.

DFG의 도서관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은 이 분야의 전문가 29명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결정된 사항은 8명의 학술도서관대표와 4명의 고등교육기관대표, 도큐메이션 연구기관장 등 13명의 명예직으로 구성된 도서관분과위원회에 상정된다.<sup>19)</sup> 이 분과위원들은 진행중인 계획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학술도서관발전에 기여하고있다. 도서관분과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26명의 도서관 주제전문가(Bibliotheksreferat)에 의해서 진행된다. DFG의 도서관 관련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15개의 종류에 달하며, 각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진행중인 계획들 중에서도 상호대차의 문제는 하나의 완전한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호대차와 관련해서 DFG는

18) Busse, G. von. Struktur und Organisation des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wesen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esbaden, Harrassowitz, 1977 p. 511

19) Busse, G. von.: Struktur... p. 512

학술잡지종합목록, 신문종합목록, 각 주제별 종합목록, 각 도서관의 단행본(주제별), 학술잡지소장목록의 발간, 학술잡지데이터베이스구축, 지역종합목록센타의 COM 목록과 ISBN 목록등 매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DFG의 도서관 발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협동수서정책(SSG-프로그램)이다. 이외에 서독상호대차, 즉 학술자료제공시스템과 직접 연결된 프로그램들은 국립전문도서관의 지원, 일상적인 자료의 정리 이외에 필요한 자료의 정리(예를 들면 과거 자료의 온라인화), 특수자료의 정리(16세기 이전 독일어 자료의 종합목록), 手書의 정리, 아카이브프로그램, 도서관연구, 도서관 자동화 등이다.<sup>20)</sup>

DFG의 도서관분과위원회의 도서관 주제전문가들은 1975년 서독 전 지역 자료제공 시스템의 현주소에 대한 Memoire<sup>21)</sup>를 발표함으로써 상호대차 전반에 관한 문제를 현안으로 등장시켰다. 특히 이 Memoire에는 상호대차의 개선안과 이를 위해 그 근간이 되는 서독국가협동수서정책의 수정안 등이 수록되어 상호대차의 발전과 신속성에 크게 기여했다.<sup>22)</sup>

DFG의 도서관지원프로그램 예산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있는 서독국가협동수서정책은 DFG의 작품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까지 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통일 후에는 동독의 도서관지원도 시작했다. 그 결과 도서관간의 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산식 자료수집은 분산식 상호대차시스템을 낳게 했다. 다음은 이 국가협동수서정책을 상세히 다루었다.

#### 나. 서독국가협동수서프로그램(SSG-프로그램)

정보화시대에서 이용자의 요구는 높아지고 자료의 양은 급격히 증가되고있다. 어느 도서관도 자료의 자급자족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서관끼리 협동하여 그들의 자료

20) Busse, G. von: Struktur... p.513

21) 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nkschrift.. Bonn-Bad Godesberg. Harald Boldt Verl. 1975

22) Überregionale. ibid. p.75

를 상호대차하는 것이다. 자료의 상호대차는 완벽한 자료수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를 위해 각국마다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 실천중이다.

자료의 수집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예를 들면 영국의 BLLD처럼, 이용케하는 집중식과 서독처럼 각 도서관이 분담하는 분산식이 있다. 국가협동수서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미국의 Farmington plan과 스칸디나비아의 Scandia plan은 이미 우리에게도 알려져있지만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지속된 성공적인 서독국가협동수서정책은 그렇지않다.

Farmington plan 은 1972년 Shared cataloging program 으로 사실상 대치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협동수서프로그램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독의 SSG-프로그램은 서독의 분산식 자료제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면서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까지 지속된 세계에서 몇개 안되는 협동수서프로그램이다.

SSG-계획의 발상 자체는 국가간의 분단 훨씬 전 1819년 레제 (Carl August Rese, 1793-1847) 로 거슬러 올라간다.<sup>23)</sup> 이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1910년 프리시아문부성 대학국의 정책책임자인 알트호프 (Friedrich Althoff)부터였다. 처음 프리시아에서 시작된 협동수서계획은 1920년대에 독일제국의 국가협동수서계획으로 발전됐다.

세계1차대전 후 정치이념을 이유로 유명학자들의 해외망명과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독일 학문발전의 공백을 메꾸기위해 설립된 국가차원의 독일학술비상대책재단에서 도서관 지원계획을 시작하면서 부터 이 수서정책이 본격화 되었다. 1차대전 전후 수집이 소홀했던 학술자료중 특히 외국의 자료공백을 메꾸기위해 이 재단에서는 자료 수서부서를 설치했다.

2차세계대전 후 독일제국때의 도서관들은 분단 후 그들의 장서 역시 분산되어 동 서독이 각기 체계적인 자료수집정책을 수립하였다. 서독은 2차대전 전후의 자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과거 독일제국때의 수서정책을 기초로하여 서독의 국가수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협동수서계획은 역시 독일제국시의 독일학술비상대책재단

23) Widmann, H.: Zur Vorgeschichte...p.75

을 계승한 서독학술진흥원 (DFG)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DFG는 도서관 관련 사업 예산의 절반정도를 이 수서계획에 투여하고 있다. 이 SSG-계획은 Busse가 표현했던대로 "분야별 분담 책임원칙"<sup>24)</sup>에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별 분담은 지방, 문화, 언어(regional, cultural, language responsibility)를<sup>25)</sup> 중심으로 구별하여 Farmington plan의 나라별 원칙과 대조를 이룬다. 서독의 SSG-계획은 1975년 재조정된 계획에 의하면 113개의 주제분야를 34개의 도서관이 분담하여 수서, 보존, 이용토록하고 있다. 특히 이 SSG-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 일명 SSG-도서관들은 DFG의 지원을 받아 입수한 자료를 전국상호대차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다. 34개의 SSG-도서관은 4개의 국립전문도서관과 4개의 전문특수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규모 대학도서관들이다. DFG에서 SSG-도서관에 지원하는 자료는 주로 외국의 학술자료중에서도 국내의 어느도서관에서도 소장하지 않은 전문적인 자료들이다. 이러한 특수한 자료중 외국학술잡지와 단행본의 비율은 5:3이다. 최근에는 위 두 종류의 자료이외에도 기술보고서, 국제회의자료등 일반 도서 유통시장을 통해 입수곤란한 non-conventional한 자료도 DFG의 자료지원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sup>27)</sup>

DFG의 SSG-계획을 위한 자료의 수집방법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DFG 도서관 자료분과위원의 전문위원들이 직접 현지 여행을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Autopsie방법이며, 두번째는 Washington과 동경에 분점을 설치하여 현지의 담당자가 자료를 구입하는 방법, 세번째는 SSG-도서관에서 자료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자료입수과정인 구입, 기증, 교환 등이 속한다.<sup>28)</sup> 특히 첫번째 방법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국가서지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않은 국가의 자료구입을 위해서 실시한 매우 적극적이고도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

24) G.V.Busse : Warum Gemeinschaftlich Erwerbungs Plane? in : .Buch und Welt. Festschrift fur Gustav Hoffmann Zum 60. Geburtstag:1965.p.140

25) Uberrregionale. *ibid.* p.104-107

26) Uberregionale. *ibid.* p.109-112

27) Ubertrrgionale. *ibid.* p.41-47

28) Uberrregionale. *ibid.* p.87-88

고 있다. 이 방법은 Farmington plan의 Blanco order 방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상호대차의 완벽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DFG의 노력은 Leitstelle fur negative Bestellung(steering center for negative liability slips)을 설립한데서 엿 볼 수 있다.<sup>29)</sup> 여기서는 전국상호대차에서 해결되지않은 이용자의 대출용지를 수집, 분석하여 통계를 낸후 각 분야별로 해당 SSG-도서관에 통보한다. 동시에 이 센터에서는 미해결 자료의 구입예산을 DFG로 부터 지원받아 자료를 구입하여 해당 SSG-도서관에 배포한다.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주로 서독의 어느 도서관에도 소장되지않는 아주 전문적인 외국학술자료들이다. 이와같은 국가협동수서정책에서 DFG의 기능은 자료 구입의 완벽성을 통해 전국상호대차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SSG-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외국의 학술잡지의 구입방법은 다음과 같다.<sup>30)</sup> 외국학술잡지는 먼저 A, B군으로 구분한다. A군의 학술잡지는 전문분야의 잡지이면서도 일반성을 띤 잡지로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한 것들이다. B군의 잡지는 전문분야에서도 특수성을 띤 전문지로서 서독의 어느 도서관에서도 소장하지않고 전국에 1~2군데서만 소장할 수 있는 잡지다. DFG의 지원은 주로 B군의 학술잡지 구입에 해당되며, 구입된 학술잡지가 전국상호대차서비스에 제공되는것은 당연시 되고 있다. DFG에서는 SSG-도서관의 학술잡지 구입을 위해 임시 모델목록과 외국학술잡지선별목록(Verzeichinis ausgewählten wissenschaftlichen Zeitschriften, VAZ)을 만들어 도서관에서 참조토록 한다. 이 참고자료는 DFG 도서관분과위원회의 학술잡지자문위원들이 세계 각 전문분야의 학술잡지를 이론적으로 비평이나 색인지를 통하여 선정하지 않고 직접 학술잡지를 보고(Autopsie) A와 B군으로 구별하는 독특한 방법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다.

국가협동수서계획은 1차대전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Alternative로 시작되었고, 또 2차세계대전 후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었다. 그

29) Busse, G. von: Struktur...p.538-539

30) Bericht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1951/1952 pp.63-64

러나 학자<sup>31)</sup>들간에는 현재의 안정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의 모색, 예를 들면 영국의 BLLD처럼, 애매한 토론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 계획의 장단점의 결과를 분석하고 또한 몇십년동안 구축해놓은 장서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 다. 지역종합목록센타(Regionale Zentralkatalog, ZK)

상호대차에 필수적인 도구는 종합목록이다. 독일에는 미국의 National Union Catalog이나 영국의 British Museum 목록처럼 국가종합목록이 없다. 독일에서는 1902년대에 국가종합목록인 독일종합목록(Deutsch Gesamtkatalog, GK)을 시작했다. 처음 이 GK는 프러시아 내의 도서관과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비엔나 국립도서관의 장서로 한정했지만 1936년 알파벳B부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서관들을 모두 포함시킨 102개의 도서관 장서를 수용하였다.<sup>32)</sup> 그러나 세계제2차대전으로 인하여 종합목록의 발간은 알파벳 Beeth로서 끝나고 그외의 자료들은 전쟁 중 소실되었다. 카드형태로 유지되었던 당시의 종합목록은 책자형 국가종합목록의 발간을 목적에 두었다.

서독의 상호대차에서 과거 독일국가종합목록을 대신하던 것은 주단위의 지역종합목록센타이다. 7개의 ZK는 1946년부터 1956년사이에 각 주단위로 주의 도서관 중심지인 서백림, Frankfurt, Gottingen, Hamburg, Koln, Munchen, Stuttgart<sup>33)</sup>에 설립되었다. 이 센타가 있는 도시들은 도서관 발전사적으로 볼 때 정사서, 주제전문사서의 교육기관이 소재한 곳들이다. 이 ZK의 설립당시 이 센타의 기능은 각 지역단위로 그 지역 도서관의 소장사항을 카드목록 형식으로 수집, 정리하여 지역클리어링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점차로 이 센타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종합목록센타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ZK의 설립당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이 ZK가 과거 독일국가종합목록을 위한 준비단계인지, 아니면 각 주 중심의 강력한 지방자치제 행정체제에 따른 영구적인 분산식 지역종합목록센타의 설립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서독도서관협회의 종합목록분과위원회의 목

31) Kluth, R.: Grundriss der Bibliothekslehre, Wiesbaden, Harrassowitz, 1967, p. 109

32) Totok, W., Weitzel, R., Weimann, K.-H.: Handbuch der bibliographischen Nachschlagwerke. p. Klostermann, Frankfurt a. M., p. 12

33) Busse, G. von: Struktur... p. 319

록전문가들과 ZK를 후원하였던 DFG<sup>34)</sup>는 서독의 도서관시스템과 도서관의 운영, 행정상의 이유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서독의 자료공급체제는 분산식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7개의 ZK로 결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각 주마다 각 지역단위의 상호대차규정이 바로 확정된 상태였고, 각 도서관의 장서수집을 봐서도 대규모 국가 연방중심 보다는 각 주 중심의 소규모 종합목록이 이용에 편리하며, 지역종합목록에 도서관의 소장사항을 보고하는 도서관끼리의 직접적인 교류도 수월하며, 특수전문자료를 소장하고있는 소규모의 도서관의 장서도 지역종합목록에 포함시켜 상호대차에 이용되도록한다는 장점들 때문이었다. 또한 연방차원에서 항구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종합목록을 강력히 지방자치체 중심의 주단위로 활성화시킨 원인들 중의 하나였지만 또 다른 원인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찾기도 한다.<sup>35)</sup> 즉 전쟁 실패 후 국가종합목록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강박관념과 과거 독일종합목록을 상징으로 하는 완벽주의적 편향은 위와 같은 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도서관의 전산화가 시작되면서 ZK도 온라인화 추세에 힘입어 독일도서관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종합목록망을 구축하여 국가종합목록센타 경향으로 의견이 집중되고 있고, 이에 학술잡지데이터베이스는 완료 단계에 있다. 단행본 문헌정보의 온라인화는 각 지역 ZK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추진중이다.<sup>36)</sup> 그러나 통일 후 완전한 독일국가종합목록의 구축에는 동독자료의 정리란 커다란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ZK의 기능<sup>37)</sup>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합목록의 유지, 상호대차서비스, 각 지역내 도서관에 정보제공과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상담과 보조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ZK에 참여하는 도서관은 그들의 자료가 당연히 상호대차서비스를

34) Busse, G. von: Struktur... p.550

35) Busse, G. von: Struktur... p.329

36) Heydrich, J. 125 Millionen B nde. Die regionalen Zentralkatalog als Nachweisinstrument in deutschen Leihverkehr (DBI-Materialien, 52). Berlin, DBI, 1986 .p.77

37) Busse, G. von: Struktur... p.329ff

위해 제공되는것을 전제로 한다. 70년대 들어와서 대학도서관 시스템의 변화로 중앙도서관(Campus Library) 이외에 각 계열별 분과도서관과 연구소도서관이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도서관과 계열별 전문도서관은 그들 장서의 전문성으로 인해 ZK에 포함시켰다. 국 공립도서관 이외의 대기업의 전문특수도서관도 ZK와 협의하여 지역내의 자료제공시스템에 참여했다.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에의 참여는 ZK의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상호대차의 근본 취지는 학술자료의 제공이었으나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요구도 과거와는 달라 지금은 상호대차의 참여를 확대시켜 도서관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DFG의 지원은 ZK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지역종합목록센터인 ZK는 그 지역 도서관 장서 소장사항에 대한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클리어링하우스이다. 만약 소규모 도서관에서 그들의 소장사항을 ZK에 보고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정리 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때는 DFG의 예산으로 ZK에서 해당도서관에 인력을 지원한다.

도서관계에 70년대부터 등장한 새로운 과제는 도서관의 전산화이었다. ZK도 전산화 작업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헷센지방에서는 ISBN 책자형 종합목록<sup>38)</sup>을 ZK의 전산화작업의 일환으로 발간하여 타지역의 ZK나 타 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상호대차의 신속성에 기여했다. 미래 각 지역의 ZK의 온라인화는 결국 전국 온라인 국가종합목록망의 실현을 의미한다.

ZK의 재정은 근본적으로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독자적인 ZK가 없는 주에서는 그 주의 도서관장서가 그 지역과 인접한 주의 ZK에 가입되며, 그 대신 종합목록 유지에 필요한 인권을 부담한다. ZK의 연례적인 업무 이외의 특별한 예산은 주로 DFG에서 보조한다. 라인강의 기적과 함께 각 도서관의 장서량은 증가됐고, 그 결과 ZK의 업무량은 당연히 몇배나 많아졌다. 상호대차를 통한 신속한 자료의 공급은 결국 각 도서관에서 그들의 최신 문헌정보를 신속하게 해당 ZK에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련업무에 대한 DFG의 지원은 항상 지속되고 있다.

#### 라. 지역상호대차(Regionale Leihverkehr)

지역상호대차는 한 지역(주)내의 상호대차 요구를 가능한 한 타 지역에 넘기지

38) Heydrich, J.: 125 Millionen B nde...p.43



않고 그 해당 지역에서 소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심점은 바로 위소단원에서 언급된 지역종합목록센터(ZK)이다. 한 지역내 상호대차의 자급자족은, 특히 국내 출판물의 100%의 충족은 전국상호대차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며, 이는 곧 지역, 전국상호대차의 신속성을 의미한다. 이 지역상호대차제도의 자급자족을 위한 하부구조로서는 각 주단위의 도서관발전계획, 예를 들면 Nordrhein-Westfalen주의 Nordrhein - Westfalen - Program(1975), Bayern주의 Landesentwicklungsproram-Bayern(1976)과, 공동수서계획, Sondersammelgebiet-splan der Grosstadtbiobliothken in Nordr-hein-Westfalen(1956년)등이 있으며 상호대차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상호대차규정 이외에 주단위의 상호대차규정인 Regionale Leihring NRW(1971)과 Richtlinien fun den Bayrischen Leihverkehr (1966)등등이 수립되어 있다.<sup>39)</sup>

지역상호대차의 참여 범위는 읍면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거주지에 도서관이 없는 이용자의 요구등에서 시작하여 학술, 전문도서관의 이용자까지 전체를 망라한다.

전국상호대차(Uberregionale Leihverkehr)가 지역상호대차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학술잡지 자료의 요구를 담당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 지역상호대차는 국내 출판물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 출판물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각 주에서 자급자족하기위한 주단위의 공동수서계획은 DFG의 SSG-프로그램을 모델로 수립됐으며, 이 두 차원의 협동수서계획은 병행되고 있다.

지역상호대차의 과정<sup>40)</sup>은 다음과 같다.이용자가 거주지의 도서관에 자료대출을 신청하나 해당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의 요구는 이용자 거주지의 타도서관들에서 탐색된다.여기서도 이용자 요구가 해결되지 못할 때는 상호대차 대출용지는 그 지역의 지역 대표도서관(Leitbibliothek)으로 보내 진다. 이 지역 대표도서관에서는 다양하게 준비된 참고자료와 각종 서지도구를

39) Busse, G.von:Struktur...p.326

40) Busse, G.von:Struktur...p.613

근거로 이용자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서지적 사항을 확인한 후 대출용지를 그 주의 ZK에 보내어 자료에 대한 소재사항을 대출용지에 기재한다. 이러한 지역 대표 도서관의 조정(Steering)과 걸르는(Filter)기능을 거친후 분홍색 상호대차용 용지는 청구된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에 보내진다. 이 대출용지를 ZK에서 보낼 때의 임무는 청구된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이 둘 이상일 경우 소규모 도서관에서 대규모 도서관의 순서로 보낸다. 동일한 자료가 대규모 도서관,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할 경우 그 대학도서관은 자체 이용자의 서비스로 인하여 자료의 이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용율이 저조한 소규모 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대규모 도서관의 이용, 업무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상호대차의 신속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만일 ZK에서도 청구자료의 소재사항이 확인되지않은 경우 대출용지는 타주의 ZK에 보내지거나 아니면 즉시 이용자가 요구한 자료의 주제전문분야의 국립도서관, SSG-도서관 또는 특수전문도서관으로 보내진다. 전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70년대에 들어 상호대차서비스의 신속성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면서부터 후자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 마. 전국상호대차(Uberregionale Leihverkehr)

지역상호대차에서 해결되지 않은 외국학술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는 전국 상호대차에서 해결된다. 전국상호대차서비스의 중심점은 1973년 서독 도서관발전 계획(Bibliotheksplan '73)에 의하면 4단계<sup>41)</sup> 계층적 서독 도서관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 4번째 단계의 도서관들은 전국상호대차를 책임지는 국가차원의 도서관들 즉 국립도서관, 국립전문도서관, SSG-도서관, 부분적인 DFG의 지원을 받는 전문특수도서관들이다. 이 도서관들 중에 서독국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 자체의 여러가지 특수한 기능으로 인하여 특별한, 예를 들면 국내출판물에 대한 소장사항을 전국 어느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호대차에 직접 관여한다. 그리하여 전국상호대차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서관들은 국립전문도서관, SSG-도서관과 전문특수도서관으로 압축된다. 전문특수도서관을 제외한 4개의 국립전문도서관(의

41) Bibliotheksplan '73...p.18-19

학, 경제, 농경, 기술)과 SSG-도서관들은 2차세계대전 전 부터 수집한 특정 분야의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DFG의 지원을 받고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전국상호대차에 제공함을 의무로 삼고 있다.

협동수서정책을 중심으로 구축된 서독의 분산식 상호대차제도인 국가자료 제공 시스템은 1970년대 중반 영국 BLLD인 중앙집중식 자료제공시스템이 등장한 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서독의 역사, 문화, 정치적인 배경에서 과거의 시스템을 계속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으로 일단락되었다.<sup>42)</sup> 또한 70년대부터 설립된 국립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중앙집중식 상호대차의 성격이 엮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DFG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분산식시스템의 지향에는 변함이 없다.

상호대차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그들의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직접대차(Direkt Verkehr)라고 한다. 직접대차는 이용자의 요구가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지역종합목록센터인 ZK를 거치지 않고 대출용지를 직접 해당분야의 국립전문도서관, SSG-도서관 또는 특수전문도서관에 보내어 여기서 이용자에게 자료를 직접 우송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직접대차서비스는 일반 상호대차에서 필요로한 여러가지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상호대차의 최대 관심사인 자료제공의 신속성이란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먼저 과학, 기술분야의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서비스에서 다루는 자료는 주로 정기간행물기사이다. 일반 상호대차와는 달리 직접대차는 이용자 부담이지만 신속성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DFG는 상호대차의 신속성을 위해 특정분야의 국립 전문도서관들과 해당분야의 SSG-도서관들이 전문도서관 대차망(Lending network)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장안은 과학 기술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의 자료제공에도 확산되도록 DFG는 서독상호대차규정 개정안 작업에서 노력중이다.

42) Uberregionale....p.32

## 2. 동독의 상호대차

2차대전 후 소련 점령지역으로 지정됐던 동독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난 직후부터 즉시 상호대차의 재활동에 착수하였다. 1949년 동독학술도서관 실무자들은 새로운 상호대차규정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이 작업과정에서 동독은 서독과 차이를 보였다. 서독에서는 1930년 과거 독일상호대차규정을 기초로하여 변화된 상황만을 참작하여 1948년 임기용변으로 보완규정을 만든 반면 동독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규정작업에 착수했다. 동독(독일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은 그 국가의 기틀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 특히 경제적으로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하에서 발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개념, 목적, 기능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독의 상호대차규정이 서독의 그것보다 일년 늦은 1949년에 탄생된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상호대차규정 제1조에서도 "상호대차는 먼저 동독의 공공행정기관, 경제, 기술,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동독 제1차 2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자료의 공급을 목적으로한다."<sup>43)</sup>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은 상호대차는 새로운 목적 설정에 나섰고, 이는 상호대차가 동독의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의 명령수행에 필요한 수단으로 예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49년의 상호대차 임시규정은 1955년과 1965년, 또 1975년 세차례<sup>44)</sup>에 걸쳐 개정되었다. 1955년의 첫번째 개정은 국가분단 후 독일제국 시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동독자체의 새로운 행정체제로 돌입한 후에 단행되었다. 그 한 예로 동독 국토에 남았던 과거의 다섯개 주는 1952년에 14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시스템에는 물론 상호대차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대차규정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했다. 1965년의 규정은 1968년에 제정된 동독도서관법에 명시된 도서관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에 부합시키기 위해 그 개정의 타당

43) Schmiedecke, K.: Zur Weiterführung des Zentrallatalog der DDR.

Zeitschriften und Serien des Auslandes(ZKZ). ZFB. 1978 p. 459

44) Kunze, H.: Grundzüge der Bibliothekslehre, 4. neubearb. Aufl. Leipzig.

VEV Verl. für V Buch und Bibliothekswesens 1977 p. 344-348

성을 찾았다. 1968년의 도서관법에 따른 세번째 시행령의 일환으로 1970년 상호대차와 종합목록을 위한 조정대표기관(Leiteinrichtung für Leihverkehr und Zentralkatalog)이 설립되었다. 이 대표기관은 동독국립도서관 산하의 상호대차와 종합목록을 위한 연구소<sup>45)</sup> (Institut für Leihverkehr und Zentralkatalog, ILZ)로 개칭되면서 실질적인 동독의 상호대차업무를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등장했다. 이 중앙기구의 명칭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ILZ는 국가종합목록 등 상호대차의 기본 도구인 각종 종합목록을 발간, 유지하고 전국상호대차의 중앙조정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동독상호대차시스템은 자료의 공급면에서는 서독과 거의 비슷한 분산식 제도를 택하였지만 동독 상호대차 전반에 걸친 행정관리측면에서는 중앙집중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앙집중식제도 총 본산인 ILZ설립으로 인해 또다시 상호대차의 규정에 보완이 필요하게 됨으로서 1975년 통일전까지 적용되던 세번째 상호대차규정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상호대차규정이 수차례의 수정을 거치는 동안 상호대차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범위도 매우 다양해지고 확대되었다. 1968년의 도서관법에 따르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sup>46)</sup>

- 일반학술도서관과 전문도서관
  - 백립의 국립도서관
  - 라이프치히의 독일도서관(국가서지 작성기관)
  - 국립학술전문도서관
  - 아카데미도서관
  - 대학 전문대학도서관
  - 각 지역(Bezirk)의 일반학술도서관
  - 국가기관과 기업체도서관

45) Rother, E.: Die Deutsche Staatsbibliothek und zentraler Leiteinrichtung auf dem Gebieten Leihverkehr und Zentralkataloge. ZfB. 1980, p.307

46) Rother, E.: Leitfadens Leihverkehr.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1984, p.12

## - 국 공립도서관

- o 시립도서관과 각 구청소재지의 도서관
- o 군소재지 도서관
- o 면소재지 도서관
- o 각 지방의 중앙도서관
- o 소규모 마을도서관

## -노조도서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차에의 참여는 처음부터 당연시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상호대차의 주목적은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이었다. 전쟁 후 부터 동독이란 국가가 탄생되기 전 까지만 해도 공공도서관은 그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구심점이 없이 각 주마다 제각기 발전하였다. 동서독이 완전히 분단되고서부터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아래 공공도서관망이 조직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945년 작센지방의 2,200개의 군면읍 소재지에 970개였던 공공도서관은 1949년에는 1,464개로 증가됐다.<sup>47)</sup> 또한 제1차 국가5개년계획(1950-54)동안 공공도서관망의 구축을 위해 1950년 문화성에 도서관중앙연구소(Zentralinstitut für Bibliothekswesen)가<sup>48)</sup> 설립 되었다. 이 연구소는 동독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본 문제의 연구에 중점적 사업을 벌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도서관망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이 1965년 법적으로 동독의 상호대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연구소의 첫 개가를 올렸다. 이는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 권리를 부여한다는 국가사회주의의 기본이념과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요구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이리하여 동독의 상호대차는 모든 도서관에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47) Schwierk, A.G.: Zur sozialistischen Theorie und Praxis des Buchwesens in Osteuropa. (Elementes des U Buch und Bibliothekswesen, Bd 6).

Wiesbaden, Ludwig Reichert Verl. 1981 . p.171-172

48) Kunze, H.: Grundz ge...p.78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인 상호대차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도서관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협동을 전제로 해야만이 가능하다. 동독의 상호대차시스템은 크게는 서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서독과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국가협동수서를 통하여 주제분야별로 도서관들이 분담하여 수집했다. 이러한 자료의 분담수집은 분산식 자료제공시스템을 의미한다.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제공의 구조면에서도 동독도 서독과 같이 지역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지역종합 목록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서독에서와는 달리 동독에서는 지역상호대차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용자 요구의 충족을 위한 국가 종합목록인 ILZ가 있음으로써 동서독이 자료제공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독의 경우 한 지역종합목록센터인 ZK에서 자료의 소재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타 지역의 ZK로 넘어가며 이때 지역대표 도서관의 조정을 받는다. 반면 동독은 한 지역종합목록센터에서 소재파악이 되지않은 자료는 즉시 백립의 ILZ로 넘어감으로서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동독에서는 서독에서와 달리 전문도서망과 전문종합목록센터가 있어 자료제공의 채널이 다양하다.

다음의 각 소단원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동독상호대차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인 국가협동수서계획, 상호대차와 종합목록연구소인 ILZ, 지역종합목록센터와 지역상호대차, 전문도서망과 전문종합목록센터들을 차례대로 고찰한다.

#### 가. 동독 국가협동수서정책

과거 1910년부터 소규모로 시작되어 192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조직, 실시되어오던 전문분야별 국가수서정책은 국가의 분단으로 제각기 재조직 되었다. 본격적인 동독의 협동수서정책은 서독보다 늦은 1956년 동독도서관협회의 수서정책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국가의 분단 후 동독에서는 5개년 국가경제계획의 일환으로 맨 처음 교육제도의 개혁과 산업분야의 중점적 연구 개선을 위해 여러분

49) Schwarz, G.: Zur Entstehung und neuen Konzeption des Sammelschwerpunktplans. ZfB. 1968. p. 321

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됐다.<sup>50)</sup> 이에 따라 학술연구자료를 지원하는 도서관 분야의 변화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56년 동독국가협동수서정책에는 먼저 10개의 도서관이 참여하였고, 전문주제 분야는 60개로 분류되었다. 이 첫번째 계획은 초창기 냉전시대 동구권의 사회주의의 발전과 경제기술 중심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58년 이 수서계획은 고등교육부에 이관되면서 점차적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되었다. 10년 후인 1966년 이 첫번째 수서계획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1956년의 계획이 대부분 대학도서관 중심으로 편성된데 감안하여 두번째 계획은 대규모의 일반학술도서관과 전문특수도서관을 포함시켜 전국적인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조직하였다. 특히 이상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원활한 연구자료의 공급은 외국의 신간서적의 구입과 이 구입된 자료의 정리를 위한 재원과 인력의 확보가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의 체계적인 시스템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판단 아래 협동수서계획은 적극적으로 진척되었다. 이러한 동독의 협동수서시스템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 문화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서독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지형상의 특수조건에서의 국가자료 제공시스템을 정당화시켰다.

1966년의 2차계획은 1차계획에서의 전문주제분야 61개를 160개로 세분화해서 분류했다. 주제분야의 확장은 결국 참여 도서관의 확대에 이어졌고 또한 이와 동시에 자료의 정리수준도 더 높아지게되었다. 이렇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협동수서정책에 참여하는 도서관들은 각 분야의 정보도큐멘테이션 센터를 대표하는 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여 결국은 도서관과 정보도큐멘테이션 센터의 접목을 가져왔다.

그러나 2차계획의 원대한 포부와는 달리 여러가지 전문분야(예로서 물리학, 천문학 등)전담도서관의 배분이 충분히 고려되지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64년 고등교육부에 신설된 학술도서관중앙정보센터(Das Methodische Zentrum)<sup>51)</sup>는 아직 미분양된 주제분야와 또한 학문의 세분화로 인해 계속 신설되는 주제분야에 해당

50) Kunze, H.: Grundz ge... p.129

51) Schwarz, G.: Zur Entstehung... p.322



되는 도서관을 지정하는 역할 조정에 나섰다. 동독에서 학술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수립, 전담하는 이 학술도서관중앙정보센터는 지속적으로 국가수서정책을 조정하고, 특히 이 계획을 동독 도서관법에 정착되도록 법적 뒷받침에 주력하였다.<sup>52)</sup> 다시 말하면 각 주제분야를 전담하는 도서관들이 이 계획을 단순히 추상적인 계획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정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지원을 받도록 이 학술도서관중앙 연구소가 노력했음을 뜻한다.

1966년의 계획은 70년대를 보내면서 또다시 새로운 전문분야가 탄생되고 또 여러가지 인접분야가 생김으로 인해 수정, 보완을 필요로 했다. 지속적인 사회주의 모델 건설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은 과학기술분야의 원활한 자료제공을 더욱 더 요구하게끔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들어 이 계획에 또 다른 수정<sup>53)</sup>을 가하게 되었다. 80년대의 수서계획은 개정된 도서관법과 연계되었고, 이 수정계획을 통하여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보시스템에서 주체적 역할을 주도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협력체의 구심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70년과 80년에서는 자료의 수집범위도 과거의 단행본과 학술잡지 위주에서 학위논문, 회의자료, 기술보고서, 회사자료 등 소위 Unconventional한 자료로 확대되었다.<sup>54)</sup> 그러나 이러한 과대한 의욕에 비해 세계적인 사회주의 퇴조 전반에 걸친 경제의 침체로 재정지원이 이를 따르지 못했다.

1983년의 세번째 협동수서계획은 도서관들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유도하였고 또한 주제분야도 더욱 세분화되어 196개로 확장되었다. 특히 70년대에 설립된 6개의 국립전문도서관과 특수전문분야의 자료를 소장한 전문도서관끼리 전문도서관망을 조직하면서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296개의 주제분야는 크게 5개의 카테고리 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인문사회과학과 마스레닌주의가 105개, 기술이 91개,

52) Kunze, H. : Grundzuge...p.323

53) Hochsmann, D. : Die zweite Auflage des Sammelschwerpunktsplanea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des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fB, 1984. p.484-486

54) Hochsmann, D. : ibid. p.484

수학1, 자연과학이 55, 의학이 22개, 농경제가 10개였다.<sup>55)</sup>

이 국가협동수서정책은 5년을 주기로 각 도서관마다 그 성과에 대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받았다. 서독의 SSG-계획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DFG 독자적인 재단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동독의 협동수서계획은 서독의 그것과 조직이나 운영자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앙집중식 행정체제하에서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도서관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특히 국가상호대차를 통한 자료제공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학술자료의 빈곤은 동독상호대차시스템이 서독의 그것과는 큰 격차를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상호대차와 종합목록연구소(ILZ)

동독의 상호대차는 1968년의 도서관법과 이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ILZ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ILZ는 동백림의 국립도서관 산하 연구소로서 전국상호대차를 지휘 조정한다. 여기서는 동독국가종합목록이 유지되며 전국상호대차 뿐만 아니라 지역상호대차의 중심역할은 물론 상호대차에 관련된 모든 통계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ILZ는 동독고등교육성과 문화성의 위임을 받고 동독도서관협회와 협의하여 동독도서관 발전을 주도하고 국내, 국제상호대차의 마지막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제상호대차에서 동독은 1981-1985년의 계획으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도서관들의 종합목록계획을 주도하기도 하였다.<sup>56)</sup>

ILZ의 전신은 1905년에 독일국가종합목록을 위해 설립된 클리어링하우스격인 독일도서관 중앙정보센터로서 당시 백림의 왕립도서관에 설립되었다. 독일국가종합목록이 완성될 때까지 이 중앙정보센터에서는 각 도서관에서 보내온 카드목록을 근거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해준다. 만약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준비중이었던 국가종합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중앙 정보센터에서는 소재가능한

55) H chsmamm, D.: *ibid.* p.p.486

56) Rother, E.: "Die Deutsche Staatsbibliothek und zneccrale Leiteinrichtung auf dem gebieten Leihverkehr und Zentrakataloge." *ZfB*, 1980, p.307-310

도서관에 Search card를 이용해 문의한다. Search card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청구자료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목록함에 수집한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카드만을 종합한 정보는 국가협동수서정책에 참여한 도서관에 연락하여 보충등록 권고한다. 이렇게 독일의 상호대차를 진두지휘하고 자료의 완벽한 수집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중앙정보센타가 소속되었던 백림의 왕립 도서관은 국가의 분단 후 동독에 남게 되면서 그 명칭도 동백림국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2차세계대전 전까지 수집됐던 중앙정보센타의 자료 2백50만 서명과 그의 보충자료(1938년에 292,000 카드), 참고자료 5,000종은 전쟁으로 거의 소실되었다.<sup>57)</sup> ILZ가 70년대 설립되기 이전 동백림의 국립도서관은 분단 후 부터 다시 자료의 수집에 들어가 외국단행본목록,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과 그의 지역중심의 5개 지역 종합목록 구축에 박차를 가해 국가상호대차의 기틀을 마련했다.<sup>58)</sup>

ILZ의 국가 종합목록은 각 도서관의 지역 종합목록센타에 보고하는 카드를 한장 더 여기에 보냄으로서 유지되고있다. 1975년 부터는 70년대에 들어와 비중이 커진 회의자료, 보고서, 신문, 학위논문, 마이크로 자료 등도 ILZ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자료로 지정되어 종합목록의 기능이 한층 더 확대되었다.

다. 지역상호대화와 지역종합목록센타.

1949년 동서독이 분단국가로 정식 출범한 후 3년이 지나서 동독에서는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단행되었다. 과거의 행정체제는 새로운 정치이념에 따라 대 변혁을 가져온 결과 동독의 영토는 과거의 5개 주(Land) 단위에서 14개의 지역(Bezirk)으로 구분됐다.<sup>59)</sup> 이에 따라 독일제국 전 부터 소영주국가를 중심으로 설립됐던 주립도서관(Landesbibliothek)들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이념에 위배된 과거 봉건체제의 유산이라는 오명아래 해체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성격의 도서관으로 바꾸어지기도 했다.<sup>60)</sup> 서독에서는 과거의 대규모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57) Kunze, H. : Grundzuge...p.333

58) Rother, E. : die Deutsche Staatsbibliothek...p.308-309

59) Schwierk, A.G. : Zur sozialistiscgen...p.172

60) Burgemeister, B. : "Regionalbibliotheken in den neuen Bundeslandern" ZbBB(1991)p.352

도서관 시스템을 재정비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독에서의 새로운 도서관 시스템은 인위적인 성격이 짙게 작용했다. 그리하여 동독에서는 지역상호대차를 위하여 14개 지역에 5개의 지역 대표도서관(Leitbibliothek) 즉 지역종합목록센타를 1949년 부터 60년 사이에 설립했다. 이 지역 대표도서관은 주로 과거의 대규모 도서관이 지정되기도 했지만 인위적으로 몇몇의 도서관을 통합하여 설립하기도 했다. 지역종합목록센타인 지역 대표도서관들은 아래와 같다.<sup>61)</sup>

\*작센 주립도서관(Sächsische Landesbibliothek Dresden)

\*작센 안할트 대학및 주립도서관(Universitäts-und Landesbibliothek Sachsen-Anhalt, Halle)

\*예나대학도서관(Universitätsbibliothek Jena)

\*로스톡대학도서관(Universitätsbibliothek Rostock)

이 지역 대표도서관들은 해당 지역의 지역종합목록센타로서 담당지역의 상호대차를 위한 클리어링하우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62)</sup> 지역도서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담당지역의 상호대차 요구를 그 지역내에서 조정, 처리하고 또한 상호대차를 통한 대출요구에 관한 문헌정보의 정확성, 타당성을 확인 검사하는 것이다.<sup>63)</sup>

이러한 업무는 자체의 지역종합목록과 각종 분야별 참고서지를 바탕으로 자료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료봉사의 신속성을 위해 요구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의 청구기호까지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지역 대표도서관은 동독국립도서관의 ILZ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내의 모든 도서관에 들어오는 상호대차에 관한 전반사항을 지시한다.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는 각 지역의 공공, 학술도서관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한 지역 종합목록센타에서 요구된 자료의 소장사항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이 상호대차 대출용지는 백립의 국가종합목록이 있는 ILZ나 전문도서관망으로 넘어간다.

61) Roloff, H. : "Die Zentralkatalog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ibri 14(1964).Nr2. p.176-181

62) Rother, E. : Leitfaden...p.98

63) Rother, E.: ibid. p.14

#### 라. 전문도서관망과 전문종합목록센터

전국지역단위의 상호대차 이외에 또 다른 자료의 이용방법은 전문도서관망과 국립전문도서관을 통해서이다. 이 전문도서관망과 국립전문도서관을 이용한 상호대차는 자료제공의 신속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는 서독의 직접대차와 비교될 수는 있으나 그 조직이나 운영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1968년의 도서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1972년 부터 전문도서관망과 국립전문도서관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전문도서관망은 전문분야의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도서관끼리 협력하여 청구된 자료를 복잡한 일반상호대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sup>64)</sup> 이러한 새로운 상호대차의 방법은 70년에 많은 도서관들이 그들의 소속단체를 불문하고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도서관망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또한 정보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자료 중 기술보고서 같은 단행본 이외의 비도서자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전담기관을 필요로 하게됐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기관은 자연 전문도서관망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립전문도서관이 선정됐다. 그러나 특정분야의 전문도서관망을 구축하려고 하나 그 해당 분야에 국립전문도서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문도서관망에 참여하는 도서관 중 그 분야의 정보, 도큐메이션센터가 있는 기관이 국립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sup>65)</sup> 이렇게 상호대차에로의 정보도큐메이션센터의 유입은 도서관간의 긴밀한 협동을 전제로한 자료제공시스템의 합리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전문도서관망과 국립전문도서관은 상호대차의 신속성에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나 그 소속 상위기관은 다르다. 국립전문도서관은 문화성에 소속되어 있어 중

64) Schwarz,G.: und Peschke,E.B : "Leistungen des netzinternen Leihverkehr." ZfB . 1985. p.238

65) Bokovsky,H.und Hennig,H.D. : "Hohere Effektivit t durch Vertiefung der Zusammenarbeit zwischen Fachbibliotheken und Information- seinrichtungen" ZfB,1980. p.113

합행정체제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설립된 반면 전문도서관망은 소속기관이나 국가의 지원없이 동일 분야의 도서관끼리 구축한 특별한 형식의 순수한 사회주의 협동체였다는 점이다.<sup>66)</sup>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이 전문도서관망은 국가협동수서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고등교육부의 학술도서관 중앙정보센터로 소속되면서 전문도서관망과 분담수서계획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됐다.

1984년까지 설립된 국립전문도서관은 농경제, 교육, 경제, 기술, 군사, 예술과 음악, 광산, 중기계, 스포츠 등에 이른 반면 전문도서관망은 철학, 경제학, 국가와 법률, 예술과 음악, 화학, 수학, 의학, 물리학, 농경제, 중기계, 공작기계, 전기, 건축, 통신, 순수학문분야 등에 걸쳐있다.<sup>67)</sup>

전문도서관망 마다 그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수학 전문도서관망의 경우 이 분야에 아직 국립전문도서관이 설립되지않아 5개의 참여도서관들이 협력체망을 조직하여 이 분야의 상호대차요구를 1내지 5일내에 처리하는 혁신을 꾀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농경제 전문도서관망은 850개의 도서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센터는 이 분야의 정보도큐메이션 센터인 백립의 농경제 국립전문도서관이다. 자료의 지속적인 전문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도서관망의 구축과 국립전문도서관의 설립은 계속 계획되고있다. 그러나 통독 후 특히 중복되는 전문분야의 국립도서관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전문도서관망을 통한 상호대차는 신속성에 있어서는 어느 형식의 상호대차와도 비교될수 없지만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일반 지역상호대차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료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않았을 때 상호대차 요구는 국가종합목록으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전문도서관망의 상호대차는 청구한 자료가 해당 전문도서관망에 참여한 도서관에서 소재파악이 안됐을 경우 요구자료는 동독의 어느 곳에서도 자료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즉시 대출용지를 요구 도서관에 회부시킨다. 만약 자료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요구자료를 소장한

66) Rex, J.: "Die Bibliotheksfachnetz der Grundlagenforschung in der DDR-eine neue Form spezieller sozialistischer Kooperation." ZfB 1982.p.441

67) Schwarz, G. und Peschke, E. B.: Leistungen...P.237

도서관의 해당자료의 청구번호까지 대출용지에 기입하여 자료제공에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러나 한가지 제약은 전문도서관망 상호대차는 이 협력망에 참여한 도서관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모든 도서관의 장서를 상호대차제도에 참여시켜 공동으로 자료를 이용하자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도서관망을 통한 상호대차의 요구충족을 위한 기본도구는 국가종합목록과 지역종합목록 이외에 동백림의 국립도서관에서 유지되고있는 전문종합목록이다. 이 전문종합목록은 1984년까지 7개가 설립되었다. 음악,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역사, 외국지도, 고서, 중세 手書 분야의 전문종합목록은 동백림의 국립도서관에서, 체육분야의 그것은 이 분야의 전문도서관망 센터인 라이프찌히의 독일도서관에서 유지되고 있다.<sup>68)</sup> 이렇듯 대부분의 종합목록이 상호대차와 종합목록연구소가 소속된 동백림 국립도서관에 집중되어있는 점은 서독의 분산식 도서관시스템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독의 중앙집중식 국가행정체제에 따라 도서관의 시스템도 그 영향을 받아 동백림의 국립도서관은 전국상호대차의 중심이며, 또한 대부분의 전문종합목록의 센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종합목록센터나 전문도서관망, 또는 분담제 자료수집정책과 그 공급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도서관 시스템이나 상호대차 시스템을 단순히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나 또는 당위론적으로 중앙집중식이라고 단정짓는데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반론의 근거는 과거 독일의 소영주 국가단위 때 부터 발달됐던 도서관협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도 Kunze<sup>69)</sup>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도서관이 어떤 시스템을 택하던 모든 도서관의 업무는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이니셔티브없이 발전이 불가능하다. 협동은 이러한 도서관 경영방침 위에서만 가능하며, 도서관 협동의 대명사인 상호대차는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명령 하나에 의해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

68) Felke, H. : "Zur Bildung von Fachbibliotheksnetze für wichtige Grundlagendisziplinen." ZfB. 1978. p. 410-412

69) Kunze, H. : Grundz ge... p. 71

구하고 동독의 상호대차는 영국의 BLLD와 비교하면 자료의 제공 측면에서는 분산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국가종합목록의 유지나 전문종합목록 국가협동수서계획 등 상호대차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이 동독 국립도서관의 ILZ에 집중관리되고 조정되고 있는 사실을 참작하면 완전한 서독의 분산식 상호대차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 IV. 동·서독 통일 후의 상호대차

본 장에서는 통일 후의 상호대차에 들어가기 전에 통일 후 동서독 도서관계 전반에 걸친 지금까지의 변화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후 동서독 도서관 변화는 결국 국가의 학술발전을 위한 자료제공시스템의 변화이며 이는 곧 상호대차를 뜻한다는 판단에서다. 두번째는 동서독의 통일은 흔히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통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통일은 그동안 빈곤했던 동독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동독의 도서관 수준을 서독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 균형을 유지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두번째 항목에서는 DFG의 동독도서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1992년 현재까지 통일 후 2년간 상호대차에 관한 변화를 다루었다.

##### 1. 통일에 대비한 동·서독 도서관계의 방향과 대책

1989년 10월 통일을 맞은 독일의 도서관계는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아래 동독의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sup>70)</sup>. 도서관정책은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의 기본 요소이다. 학술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문헌을 제공한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관심이 고조된것은 당연

70) Birkholz-Buchhaas, D. : "Bund-L 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s erarbeitet Empfehlungen Zur Entwicklungen des Bibliothekswessens in den alten neuen Bundeslandern." ZfBB 38(1991) p.193-196



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1990년 독일도서관협회의 Sektion 인 학술도서관협의회 추계세미나에서는 처음으로 동독 도서관 대표들 18명이 초대되어 "정치 변화에 따른 통일 독일의 도서관협동"이란 주제가 다루어졌다<sup>71)</sup>. 반면 공공도서관계는 학술도서관 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동독의 조직적이고 잘 발달된 공공도서관망은 전 국민의 직업과 자질향상, 계속교육과 직접연계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회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맞은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과제 달성을 위해 학술도서관 대표와 함께 통일에 따른 제반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관을 대표로 하는 동서독 교육위원회 산하의 도서관전문가 그룹을 1990년에 발족시켰다. 이 전문가그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통일 후 도서관 문제를 위해 결성된 6개의 도서관아르바이트그룹으로 합병되었다. 이 아르바이트그룹은 동서독 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동독의 도서관 시스템은 소련의 중앙집권체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국가체제와 중앙집중식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서독은 분단전의 분산식 도서관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가, 변경시키면서 발전을 거듭했다<sup>72)</sup>. 동독에서는 초창기 소련의 영향력이 강했을 때는 중앙집중식으로 발전하는 도중 점차적으로 분산식 시스템도 동시에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73)</sup>. 그리하여 동독에서는 그들의 중앙집중식, 분산식도서관 시스템을 통한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통일 후 서독 도서관과의 협력이나 조화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반면 완전히 이질적인 두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시스템하에서 효율적으로 신속한 자료제공을 위한 또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창조될려면 지금까지 보다 더 고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비관론도 있기는 하다<sup>74)</sup>.

71) Braun, H. : "Aus der Forschungsgemeinschaft." ZfBB(1991). p.77

72) Stolzenberg, I.M :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in vereinten Deutschland. Bericht vom 81. Bibliothekartag in Kassel." ZfBB(1991). P.506

73) Hochsmann, D. : "Erfahrungenuooderkenntnisse aus Kooperation und Arbeitsteilung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en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rlander." ZfBB(1991). p.366

74) Stolzenberg, I.M: Wissenschaftliche....p.506

동서독 협동의 성공적인 예로 자료정리의 기준인 목록규칙을 들 수 있다. 동서독의 목록규칙은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이 체계적으로 보급되기 이전 분단 당시에 도 동서독의 목록학자들이 그들의 공동규칙(RAK, Regeln für Alphabetische Katalogierungsregeln)을 연구개발하여 통일된 목록규칙을 70년대 중반부터 사용하여 왔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도서관 아르바이트그룹은 동서독의 도서관 전문가를 연방정부산하기관장과 협동하여 법적, 행정적인 조치와 단계적인 계획추진을 위해 임시로 "단기간 동독도서관발전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도서관 대표들이 동서독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990년 10월에 첫번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의 현안은<sup>75)</sup>

그룹1. 공공도서관 문제

그룹2. 인력문제/교육문제(도서관교육과 계속교육)

그룹3. 대학도서관의 자료서비스문제

그룹4. 지역, 전국적 도서관 서비스와 기관들/상호대차

그룹5. 도서관과 정보기술

그룹6. 도서관 조직과 법적문제

위와 같이 6개로 편성된 아르바이트그룹중 3과 4는 자료제공시스템의 문제를 대학도서관과 상호대차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주제 3에서 서독대표 Mittler는 동독 학술도서관의 기본장서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동독 대학도서관의 아주 기본적인 장서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도서코너의 개설과 자주 이용되는 기본장서의 보충을 위해서는 긴급보조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그는 역설했고, 이를 위해서는 그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대학도서관 자체의 자료 자급자족은 상호대차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독 대표 Marwinski<sup>76)</sup>는 통일된 상황에서 동독 도서관계의 문제는 도서관 자동화,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도서관운영의 조직, 재정, 교육과 직업문제,

75) Braun, H.: Aus der...p.77f

76) Braun, H.: Aus der...p.p 77f

통일후 서독처럼 지방자치체에 돌입한 후 그 행정상의 구조에서 대학의 자치권 문제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는 특히 학술도서관의 가장 실현 가능한 첫번째 목표는 과거 사회주의 시스템하에서 제한된 도서시장의 벽을 허물어 충분한 양질의 도서를 공급받는 일과, 도서관 자료의 구성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지않는 현대적 개념에서 출발하고, 대학도서관의 기본장서도 서독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도서지정코너를 설치하여 자주 이용되는 자료의 공급을 늘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동독 도서관계는 서독의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그들의 도서관을 서독 도서관망에로 연결하여 상호대차서비스의 향상에 관한 문제들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동독도서관의 기본장서의 부족은 이데올로기에 가려있던 재정문제가 국가의 연구자료의 제공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 2. 통일 후 DFG의 도서관 지원정책

1920년 세계1차대전 후 독일의 학문이 위기에 처해있을때 그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일학술비상대책재단은 동서독으로 분단된 후에도 서독에서는 이 재단의 전통을 답습하여 계속 서독학술발전을 위한 진흥재단으로 발전했다. 이 DFG는 서독의 학술도서관 발전사, 그 중에서도 서독상호대차의 근간이 되는 국가협동수서정책을 통해 서독의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제공시스템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역할은 통일후에도 지속되고있다. 통일 직후 DFG의 도서관분과위원회에서는 동독의 학술연구 수준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동독의 학술도서관의 지원에 착수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것이다. 1990년 DFG의 추계회의 주제는 동독의 학술도서관을 DFG의 도서관 지원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문제였다. DFG의 도서관연구팀의 제안은 먼저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데 착수했고, 그 구체적인 의견들은<sup>77)</sup>

\* 현재의 DFG에서 진행중인 도서관프로그램에 동독의 어떤 도서관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77) Braun, H.: *ibid.*, p. 73

\* 과거 서독에서는 이에 마감됐던 프로그램을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시 재검토 하거나 시작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며, 이를 위해 또 다른 별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DFG의 도서관지원 분과위원회에 동독의 도서관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인가?

\* 경우에 따라서는 DFG의 지원 이외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며, 그 한계선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러한 대안들에 관한 구체적 방침들은

\* 각 지역단위에서 부터 시작되는 자료제공서비스를 위해서는 학술잡지와 단행본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지정 도서코너제도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며 충분한 기본장서 수집을 통해 과거 40여년 동안의 자료를 매꾸는게 급선무이다.

\* 현재 진행중인 서독의 자료제공시스템 전반에 동독의 도서관들을 조화시키는 작업 : 더 세부적으로는 지역, 전국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정리시스템, 상호대차

\* 기술적인 지원

\* 자료제공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동독도서관시스템의 재정립들이었다. 위의 방침들 중에서 국가협동수서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sup>78)</sup>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

\* 현재 서독의 국가협동수서정책은 분야별, 지역별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각 주제분야의 자료수집을 더 확장시키면 더 많은 도서관이 이 수서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료수집정책은 더욱 더 세분화되며, 이로인해 상호대차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킨다.

\* DFG의 SSG-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주로 전문도서와 전문성이 매우 깊은 외국자료에 한정된다. 동독 도서관의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 기본장서의 수집이 우선이어야 하므로 국가협동수서정책에 참여시키기에는 시기상조다.

\* 동독의 국립전문도서관과 SSG-도서관에의 서독의 그것과 비교할 때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동독의 도서관들을 현재 서독의 SSG-계획에 참여시키는 것은 시기상

78) "Einbeziehung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en der neuen Bundesländer in der Förderung durch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Empfehlungen des Bibliotheksausschuss." ZfBB(1991). p.182-189

조다.

\* 특히 인문과학분야의 전국적 자료제공시스템에서 SSG-도서관의 장서는 단시일 내에 수집되는 것은 아니었다. 최신 자료보다도 오래된 자료가 이 분야의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의 SSG도서관은 지속적인 장서수집과 조직적인 장서개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쉽게 또 다른 도서관을 참여시키는데는 문제가 따른다.

\* 상호대차를 통한 전국적 자료제공시스템에는 보다 많은 인력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동독의 사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적, 내적인 통일 독일의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동독의 도서관이 전국적 상호대차에 참여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독일의 전국적 자료제공시스템이 학술연구를 위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동서독 공동의 과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업을 위해서 발족된 도서관아르바이트그룹에도 동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도서관아르바이트그룹의 업무활동은 먼저 과거 동독의 국가협동수서에 참여했던 도서관들을 염두에 두지않고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작업을 착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 작업단은 현재까지 수집된 장서의 특수성과 미래 도서관발전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DFG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주로 인접분야의 학문이나 또는 미래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은 학문분야가 해당된다. 1991년부터는 서독에서 특정 주제분야의 자료수집이 미비하고 반면 동독 도서관의 자료가 해당분야에서 특수성을 띤 장서구성일 때는 DFG프로그램에 동독의 도서관을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DFG의 협동수서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국상호대차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1년의 DFG의 예산채정을 보면 1991년의 예산보다 21%가 증액됐음을 볼 수 있다<sup>79)</sup>.

DFG의 도서관 지원 이외에도 기업체에서 동독대학의 발전을 위해 50억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는 독일 자동차회사인 Volkswagen재단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

79) Braun, H.: Aus der...P. 73

조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에 착수했다<sup>80)</sup>. Volkswagen재단에서는 그들의 기부프로그램을 위해 여러분야의 교수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자문위원들은 과거 동독의 학술연구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술자료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했다.

학술자료 중에서도 특히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분야, 예를 들면 경제학이나 법학 분야의 장서수집에서 생긴 반사회주의에 관한 자료들을 정상화시켜 이러한 자료들을 전 동독의 대학에 보급시키는 것을 기부의 목적으로 삼게됐다. 또 다른 현안으로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에 복사기와 컴퓨터를 보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다가왔기때문에 화폐의 유통에서 지원 자체로 모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 3. 통일 독일의 임시 상호대차

전장에서 이미 언급된바와 같이 동서독의 도서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까지는 많은 인력과 재정 시간을 요한다. 이 기간동안 통일 독일의 전국상호대차규정은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규정일 수 밖에 없다. 이 임시규정은 완전한 규정에 대한 기초안으로 간주될수 있기에 본장에서는 통일 후 2년동안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동서독의 이용자들이 서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제공받는가에 대한 방법을 고찰한다.

동독의 행정체계가 와해되면서 중앙정부 조직 자체가 공백기를 맞았을 때 동독의 도서관계에서는 그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 사서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사고의 전환도 문제였지만 그 보다도 더 큰 문제를 Oehmig<sup>81)</sup>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동독이 실질적으로 혼히 일컬어지는 경제통합이라는 조건으로 서독에 들어

80) Dorpinhaus, H...J. : "Das Infrastrukturprogram der Volkswagen. Stiftung fur die Universitaten der Neuen Bundeslander. Bericht uber eine Forderungsamassnahme." ZfBB(1991) p.190-193

81) Oehmig, G.E.: "Zum Stand der Bibliotheksarbeit in Schsen Anhalt." ZfBB(1992) . p.196-197

오는 즉, 서독에 합병되는 통일을 맞았을때 동독의 행정체제는 서독의 행정체제로 바뀌어지기 전까지 공백기를 맞았다. 동독의 각 행정부서와 각 지역단위의 위원자들의 영향력은 없어지고 서독 모델의 중심으로 한 주(Land)개념이 도입되는 동안 이에 속하는 하부 조직들은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때 도서관의 운영에 큰 공백기를 가져왔다. 소규모 공공 도서관과 기업체도서관 특히 노조도서관이 폐쇄됐다. 이 중에서 몇몇 도서관의 장서는 타 도서관으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장서는 팔렸거나 기증또는 폐기처분되었다. 이렇게 증발된 도서관수는 1991년 6월까지 조사에 의하면 약 1년동안 약 300여개에 달했다<sup>82)</sup>. 이에 따라 많은 실업자 사서들이 생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한것이 통일 후 처음으로 전국상호대차를 위해 발간된 도서관리스트였다<sup>83)</sup>. 여기에는 682개의 동독도서관과 1681개의 서독도서관이 수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사서들은 1990년 3월 서독 독일도서관연구소 (DBI, Deut, Deutsche Bibliotheksinstitut)의 초청으로 백립에서 임시 동서독간의 상호대차규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다음은 그 회의의 결과이다<sup>84)</sup>.

#### 가. 동서독 상호대차의 참여

서독 측에서는 서독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도서관들을 동서독의 상호대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반면 동독도서관측은 동독 국립도서관의 IL2가 지역대표도서관과 협의하여 따로 참여도서관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 나. 파트너지역(Partner-Region)간의 협력

동서독 도서관 간의 개별적인 관계를 떠나서 동서독 상호대차는 지역종합목록센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상호대차를 우선적으로 전담하였다. 이를 위해 동

82) Liste der aufgel sten Bibliotheken, Deutsche Staatsbibliothek zu Berlin Institut f r Leihverkehr und Zentralkataloge 1991.

83) Sigelverzeichnis f r die Bibliotheken des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1990, Berlin DBI, 1991.

84) Arbeitmaterialien und Informatiobeb zur Leihvirkehr, Herg. von G. Herdt und E. Henschke, Berlin, 1991. DBI p. 45ff

독의 5개지역상호대차와 서독의 ZK는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서로 한 지역종합목록센터들끼리 파트너를 정하여 동서독 두지역의 두지역 종합목록센터는 과거 하나의 지역종합목록센터개념으로 간주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동독의 한 지역종합목록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은 자료요청은 서독의 파트너지역 종합목록센터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동서독의 각 지역종합목록센터 파트너는 다음과 같다.

- ㄱ. 동독의 작센지역은 서독의 Baden-Wurtenbeg나 Bayern ZK
- ㄴ. 동독의 작센Anhalt지역은 Nideersachische ZK
- ㄷ. 동독의 Thuringen지역은 Hessische ZK
- ㄹ. 동독의 Mecklenburg은 서독의 Naddeutsche ZK
- ㅁ. 동독의 Brandenburg와 동백림은 서독의 Nordrhein-Westfalen ZK와 서백림지역 상호대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 지역내의 자료의 수송을 위한 자동차서비스는 과거대로 운영하며, 새로운 파트너 지역간의 자동차 운송서비스도 새로 시작할 예정에 있다.

#### 다. 각종 목록과 기계설비

동독의 전국상호대차 센터인 ILZ와 그 외 5곳의 지역종합목록센터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서독 상호대차파트너인 지역종합목록센터의 마이크로펫쉬목록을 소장하고 또 이에 따른 reader기를 설치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독의 학술잡지 데이터뱅크, 각 도서관의 단행본 종합목록, 각 파트너지역의 펫쉬형태 단행본 종합목록들도 가능한 한 준비하여 동독의 상호대차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독의 도서관들은 준비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점차적으로 동독의 대규모 도서관들은 서독의 학술잡지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

#### 라. 동독의 자료요청을 서독에서 조정하는 방법

1990년 서독의 Nordrhein-Westfalen ZK에서는 동독의 자료요구가 약 100% 증가되었고 반면 서독에서 동독의 해당 파트너지역에 요구한 자료의 증가는 50%에 달



했다. 즉 통일후 약 1년동안 동서독의 상호대차는 평균 180% 증가율을 보였다<sup>85)</sup>.

동독의 상호대차 요구가 서독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구자료에 대한 서지적 사항에 대한 책임은 ILZ와 5개의 지역 종합목록센터인 지역대표도서관이 진다. 동독의 도서관에서 요구된 학술잡지기사는 동독 국립도서관에서 발행되는 학술잡지종합목록에서 탐색된 후 소장도서관에서 해결을 본다. 만약 이 종합목록에 요구된 학술잡지의 소장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자료 요구는 해당지역 종합목록센터로 보내진다.

이 지역종합목록에서도 소장사항이 파악되지 않을때, 대출요구는 서독의 파트너인 해당지역 종합목록센터로 보내진다. 만약 서독의 파트너 상호대차 지역에서도 요구자료의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동독의 ILZ는 대출요구로 서독의 SSG-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인 Frankfurt의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에 보낸다. 단 독일도서관은 서독의 어느 곳에서도 자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만 상호대차에 그들의 자료를 제공하며, 그 제공방법도 국가서지 작성기관이라는 특수한 국립도서관의 기능으로 인하여 일반 대차와 다른 형식을 택하고 있다. 동독의 단행본에 대한 자료요청은 ILZ에 까지 거친 후 서독의 마이크로펄스목록에서 탐색된 후 서독의 상호대차 파트너지역인 해당 ZK에 보내진다.

마. 서독의 상호대차 요구를 동독에서 처리하는 방법

서독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호대차요구는 "동서독간의 상호대차조정안(Merkblatt für die Lenkung von Bestellungen in Leih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에 따르

85) Leihverkehr mit den neuen Bundesländern. Stand der Meldungen an die ZDB.

Hochschulbibliothekszentr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991, p.1

거나 또는 동독의 상호대차 파트너에게 보내진다. 특히 동독의 학위논문<sup>86)</sup>에 대한 요청은 논문이 수여된 대학으로 직접 보내진다.

#### 바. 비 용

서독에서는 복사물이나 마이크로필름을 20쪽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이 규정이 동독 도서관에서도 받아들여지도록 기대하고 있다.

## 결 론

독일의 상호대차제도는 분단 전 하나의 시스템에서 나뉘어졌던 두 시스템이 또 다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가고 있다. 세계2차대전 후 국가의 분단으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하에 발달된 국가 행정체제하에서 동서독의 도서관 시스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됐다. 일반적으로 학술연구도서관의 설립목적은 어느 체제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서독에 비해 잘 조직 발달된 동독의 공공도서관망과, 특히 서독에서는 설립되지 않았던 노조도서관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국민의 의식변화를 주도한 국가적차원의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모든 도서관의 협동을 밑바탕으로 운영되는 상호대차제도도 서독에서는 분단 후에도 과거의 행정구역과 도서관을 거의 답습하여 각 주(Land)중심의 분산식 지역주의 자료제공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분단 후 소련의 영향으로 과거의 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정개혁을 단행해 도서관의 자료제공시스템이 중앙집중식 경향으로 발전되었으나 과거 독일의 독자적인 정치, 역사, 문화적, 요소가 도서관계에 반영되면서 점차적으로 실질 운영면에서 분산식으로 지향되었음

86) Bleek, W und Mertens, O.L. : "Geheimgehaltene Dissertationen in der DDR." ZfBB 39(1992) p.314-326

통일 후 동독에서 1978년에서 1988년 10년 동안 41207 논문 중 16.6%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국가비밀문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흥미있는 사실들이 밝혀 지고 있다.

을 볼 수 있다. 상호대차제도의 행정관리 측면에서는 동백림의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식 시스템과 실제 자료제공면에서는 분산식 시스템을 택한 동독의 상호대차제도가 서독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통일을 맞은 상황에서 어떻게 서독의 시스템에 잘 조화를 이루어 이용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가가 현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중앙집중식이나, 분산식이나 혼합식이나 하는 어떠한 특성의 시스템의 선택보다도 동독의 도서관계 사정은 40여년 동안의 정체된 강서부족을 어떻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메꾸느냐가 급선무로 보인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독 상호대차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협동수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서독학술진흥재단에서 먼저 동독 도서관계 현지시찰을 통하여 원조프로그램에 착수했다.

통일 후 동서독 하나의 상호대차규정이 만들어지기 까지 동서독에서는 과거 지역주의 원칙하에 지역상호대차를 실시하고 동독과 서독의 이용자가 서독과 동독의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동서독의 지역종합목록센터들끼리 파트너관계를 설정하여 해당 책임지역의 상호대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지방자치제와 통일을 앞둔 우리 도서관계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 참 고 문 헌

- 1) Arbeitsmaterialien und Informationen zur Leihverkehr.  
Hrsg. von G.Herdt und E. Henschke. Berline. 1991,DBI
- 2) Aufbau und Aufgabe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Bonn-Badgodesberg.1974
- 3) Bericht der Deutschen Forschungsgemeinschaft. 1951/52.p.63-64
- 4) Bibliotheksplan '73.Entwurf eines umfassenden Bibliotheksnetzes f 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Belin. 1973 Deutsche Bibliothekskonferenz
- 5) Birkholz-Buchhaas,D.: "Bund-L 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s erarbeitet Empfehlungen zur Entwicklungen des Bbibliothekswesens in den alten und neuen bundes ndern." ZfBB 38(1991) p.193-196
- 6) Bleek,W und Meten, o.L : Hrsg : "Geheimgehaltene Dissertationen in der DDR." ZfBB 39(1992) p.314-2 326
- 7) Bokovsky,H.und Henning, H.D. : "Hohere Effektivit t durch tiefung der Zusammenarbeit zwischen Fachbibliotheken und Informationseinrichtungen." ZfB.1980. p.113-122
- 8) Braun, H. "Aus der Forschungsgemeinschaft." ZfBB 199138(1991). p.73-77
- 9) Burgemeister, B. : "Regionalbibliotheken in denneuen Bundeslandern" ZfBB(1991) p.351-357
- 10) Busse,G.von. Stuktur und orgenisation des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swesen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esbaden. Harrassowitz. 1976.
- 11) Busse, G von : "Warum Gemeinschaftliche Erwerbungsplane ?"  
Buch und Welt.Festschrift fur Gustav Hoffmann zum 65. Geburtstag.  
Wiesbaden. 1965.pp.137-150.

- 12) Dorpinhaus, H.J. : "Das Infrastrukturprogramm der Volkswagen- Stiftung fur die Universit ten der neuen Bundeslander. Bericht uber eine Forderungs-massnahme." ZfBB(1991) p. 190-193
- 13) "Einbeziehung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en der neuen Bundeslander in der Forderung durch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Empfehlungen des Bibliotheksausschuss." ZfBB(1991). p.182-189
- 14) Felke, H. : "Zur bildeung vor fachbibliotheksnetze fur wichtige Grundlagendisziplin." ZfB.1978.p.410-412
- 15) Gittig,H.und Rother,e. : "Der Leihverkehr der Bibliotheken - die Voraussetzung fur die Literaturversorgung der Wissenschaftler und Techniker." ZfB.1978. p.414-418
- 16) Gittig,H. "Der Leihverkehr der Deutschen Demokratidschen Republik unter besonderen Beruchsichtigung der Stellung des Deutschen Staatsbibliothek Berlin." ZfB.1968.p.45-51
- 17) Heydrich,J. : 125 Millionen B nde. die regionalen zentralkalog als Nachweisinstrument in deutschen Leihverkehr(DBI-Materialien, Berlin. DBI.1986 52)
- 18) Hochsmann, D : "Die zweite Auflage des Sammelschwerpunktsplanes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des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fb. p.484-486
- 19) Hochsmann, D.: "Erfahrungen und derkenntnisse aus Kooperation und Arbeitsteilung wissenschaftlicher Bibliotheken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rlander." ZfBB(1991)
- 20) Kluth, R.: Grundriss der Bibliothekslehre. Wiesbaden. Harassowitz.1967
- 21) Koschorreck, W.: Geschichte des Deutschen Leihverkehr. Wiesbaden,Harassowitz.1958

- 22) Krumholz, J.: "Zentralkataloge der DDR-Zeitschriften und Serien" ZfBB 1979, p.117-119
- 23) Kunze, H.: Grundzüge der Bibliothek. 4. neubearb. Aufl. Leipzig. VEV Verl. für V Buch und Bibliothekswesen. 1977
- 24) Lehmann, K. D.: "Neubau für die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a. M. ZfBB(1991). p.413-415
- 25) Der Leihverkeh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rsg. v. Ernst Zunker. Frankfurt a. M. Klostermann 1968 (ZfBB, Sonder. 8)
- 26) Leihverkehr mit den neuen Bundesländern Stand der Meldungen an die ZDB Hochschulbibliothekszentrum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1991
- 27) Line, M. B.: "國家相互貸借制度의 모델研究" 李鎮相 譯  
국회도서관보 1982 3·4월호 p44-56
- 28) Oehmig, G. E.: "Zum Stand der Bibliotheksarbeit in Sachsen Anhalt." ZfBB(1992) . p.196-206
- 29) Rex, J.: "Die Bibliotheksfachnetz der Grundlagenforschung in der DDR-eine neue Form spezieller Sozialistischer Kooperations." ZfB 1982. p.441-446
- 30) Roloff, H.: "Die Zentralkatalog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ibri 14(1964). Nr 2. p.176-181
- 31) Rother, E.: "Die Deutsche Staatsbibliothek und zentrale Leiteinrichtung auf dem Gebieten Leihverkehr und Zentralkataloge." ZfB. 1980. p.307-310
- 32) Rother, E.: Leitfaden Leihverkehr. Leipzig.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1984
- 33) Schwarz, G.: und Peschke, E. B. : "Leistungen des netzinternen Leihverkehrs. ZfB. 1985. p.237-243

- 34) Schmiedecke, K.: "Zur Weiterführung des Zentralkatalogs der DDR-Zeitschriften und Serien des Auslandes(ZKZ)." ZfB.1978 p.458-462
- 35) Schwarz, G.: "Zur Entstehung und neuen konzeption des Sammel Schwerpunktplans." ZfB.1968. p.321-338
- 36) Schwier, A.G.: Zur sozialistischen Theorie und Praxis des Buchwesens in Osteuropa.(Elemente des Buch und Bibliothekswesens, Bd 6). Wiesbaden. Ludwig Reichert Verl. 1981
- 37) Sigelverzeichnis for die Bibliotheken des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1990. Berlin, DBI.1991
- 38) Stolzenberg, I.M.: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in vereinten Deutschland. Bericht vom 81. Bibliothekartag in Kassel. ZfBB(1991). p.499
- 39) Totok, W., Weitzel, R., Weimann, K.-H.: Handbuch der bibliographischen Nachschlagwerke. Klostermann. Frankfurt a.M. 1972
- 40) 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 vob Wissenschaft und 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nkschrift.. Bo9 Bonn-Bad Gedesberg Harald Boldt Verl. 1975
- 41) Widmann, H.: "Zur Vorgeschichte der Sonder sammelgebiete der Deutsche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Libri.17(1967)" pp.14-24

## A study on the library interlending system in Germany

### Abstract

Moon—Ja Ro

In the modern information society any library can not meet the need of its user without cooperation with other librari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old West Germany in the general kept the traditional library system, but (the library system of) the old Eastern Germany was influenced by the Soviet Union. The East and West Germany have developed their library interlending system on their own way, but their system was based on the regional principle.

After the Unification the library interlending system of two parts of Germany is on the way to an uniform system.

Above all East Germany libraries must now collect the materials which they could not buy during about 40 years due to the ideological aspect and lacking financial resources. Th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tries here to help the East German libraries.

Before reaching the final settlement of two different library interlending rules the East and West German libraries temporary serve their user on the previous way, it means in the regional principle. During this period the East and West German libraries agree to cooperate on the base of partnership between their regional central catalog.

If the East German user's wish can not be satisfied in the East German library, then this wish is sent to its Western partner regional central catalog.